



가자 평화 구상 이후 중동 정세
김은비(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부교수)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권보람(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가자 평화 구상 이후 중동 정세



김은비(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부교수)

- 가자 전쟁이 휴전을 이루었으나 인질·구호·부분 철수만 이행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
- 트럼프의 가자 평화구상과 유엔 안보리 결의 2803호는 집행·검증·대표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가자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의 역내 패권이 강화되고 저항의 축이 약화되었으나 갈등의 근원은 남아있어 이번 휴전은 언제든지 다시 붕괴할 수 있음

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휴전

2023년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2025년 10월, 마침내 휴전에 돌입하였다. 약 700일에 걸친 이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겼고, 누적 사망자는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길고 가장 잔혹한 전쟁의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는 전쟁을 조기에 억제하지 못한 무능을 드러냈고, 이는 중동의 새로운 안보 질서가 “충격과 균열”을 통해서만 조정되는 현실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10월 휴전 협상 이후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생존 인질이 모두 송환되었다. 포성이 멎으며 구호물자가 제한적으로나마 진입했고, 가자 내부에서는 오랜 기간 찾아보기 어려웠던 ‘숨 쉴 틈’이 마련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취약하고 임시적인 평화에 불과했다. 인질



시신의 송환은 지연되고, 이를 이유로 이스라엘은 구호품 반입을 재차 제한했다. 양측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중으로, 지난 11월 19일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25명이 사망하였다. 무엇보다도 가자지구의 재건은 요원하고 주민들의 기근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휴전은 이스라엘이 단행한 '새로운 질서(New Order)' 작전이라는 급격한 확전 국면이 만들어낸 극적 반전의 산물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전력이 약화된 시점을 기회로 보고 2024년 9월부터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이란이 주도하는 이른바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 전체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탈라를 제거하는 데 사용한 작전 명칭이기도 한 '새로운 질서'는 자국을 위협해온 지역 내 군사·정치 네트워크의 핵심을 외과적으로 제거하여, 중동에서 새로운 안보 구도를 스스로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의 주요 지도자를 차례로 제거하였고, 가자시터에 대한 점령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스라엘은 더 나아가 지난 6월, 숙적인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공격하였다. 공중급유기 및 200여 대의 전투기가 동원된 '일어나는 사자'(Rising Lion) 작전으로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 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군부 주요 지도자는 물론, 이란 핵 과학자에 대한 암살도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 본토에서부터 출격하여 이란 핵 시설 폭격에 참여했다. 역내 안보 균형이 일방적인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건이었다.

확전의 정점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 제거를 목적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중재국이기도 한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공습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중동 최대의 미 공군 기지를 보유한 국가인 카타르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제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이로 인해 외교적 중재 채널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으며, 역내 국가는 분개하였다.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통하여 관계 정상화를 이룬 UAE는 물론, 아랍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스라엘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이집트는 중동판 나토(NATO) 창설을 주장하며 아랍권의 결집을 시도했다. 습격을 당한 카타르는

즉각 아랍·이슬람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아랍권의 단결을 촉구하였다.

도하 공습으로 인해 아브라함 협정의 외교적 기반이 흔들리고 휴전 협정 진행에까지 파장이 커지자, 미국은 이 사태를 외교적 재앙으로 판단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에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확대된 아브라함 협정을 완성하고자 하였는데, 그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였다. 이에 그는 몇 주 동안 하마스가 휴전 합의에 동의하도록 공개적인 위협을 가하며 강력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은밀한 압력을 통해 카타르 공습에 대한 공개 사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백악관과 국무부 라인은 카타르 추가 피격 시 방어를 약속하는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공습으로 타격받은 도하 중재 채널의 복구를 시도하며, 카타르와의 조율은 물론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카타르의 중재 역할 재개를 위한 유인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10월 10일, 휴전 1단계가 발효되었다.

2. 가자 평화구상

이렇게 타결된 "가자 전쟁 종식을 위한 20개 항(가자 평화구상)"은 '전면 휴전 → 인질·수감자 교환 → 이스라엘군 단계적 철수 → 가자 안전·통치 정비 → 재건'의 순차 이행을 골자로 한다. 11월 현재는 휴전 1단계가 시행 중으로, 합의에 따라 모든 군사 행동이 원칙상 중단되었고 인질과 수감자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11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가자 평화구상'을 토대로 한 결의 2803호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가자지구 휴전 이후의 전환 질서를 국제적 틀 안에 제도화한 첫 공식 문서로, 향후 평화구상의 이행과 재건 과정이 단순한 양자 협상 수준이 아니라 국제적 책임 체계 아래 작동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의에는 국제안정화군(ISF)의 가자지구 단계적 배치를 규정하고, 가자의 과도 행정체계를 조정·관리할 기구로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설치를 승인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더 나아가 가자지구의 안정화 및 통치 재편과 더불어 팔레스타인 기술정부 구성, 장기적으로는 "팔레스타인 국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경로(credible pathway)"를 명시함으로써, 휴전 이후 가자지구 질서 재편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한 안보리 결의에 팔레스타인 국가 가능성이 포함된 보기 드문 사례로, 아랍권과 유럽 국가들은 이를 외교적 성과로 보았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국가 지위 논의가 공식적 용어로 삼입된 데 대한 비판과 경계심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3호 결의는 휴전 1단계에서 이루어진 군사행동 중단·인질·수감자 교환·부분 철수의 연쇄를 국제적 제도 틀에 맞춰 구체화하였고, 향후 2단계에서 논의될 국제 감시 메커니즘, 통치 개편, 재건 컨소시엄 구성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번 휴전이 단순한 ‘전투 중단’이 아니라 전후 질서를 설계하는 단계적 구조임을 명확히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가자 평화구상은 근본적인 쟁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 분쟁이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스라엘의 영구 점령이 굳어질 수 있다.

이스라엘군은 1단계 합의에 따라 ‘엘로우 라인’까지 철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11월 중순 현재 라인 서쪽에 약 40개의 거점을 남겨두고 요새화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관할 구역의 재건에 필요한 전기와 수도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는 가자지구 주변에 영구적인 완충지대(Buffer Zone)를 설치하려는 장기적인 안보 구상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평화구상의 핵심인 ‘단계적 철수’ 약속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여기에 남은 인질 시신 송환이 매끄럽게 이행되지 않으면서 양측에 국지적 충돌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이스라엘군의 잔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는 이스라엘군의 철수 및 통제 범위 축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이스라엘을 충분히 억제할 장치는 미약한 현실이다.

둘째, 평화구상의 집행력이 부족하다. 논의 중인 휴전 2단계는 국제 감시 메커니즘 마련과 평화유지/안정화 임무단(ISF) 창설을 추진하고, 이스라엘의 추가 철수(‘레드 라인’)를 강제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도 ISF 파견, 평화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기구의 구성원, 운영 절차, 임무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ISF의 구성 및 참여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주도하고 지휘할 것인지, 평화위원회 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팔레스타인 내부 인사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질 것인지 등이 모두 불투명하다.

게다가 감시와 검증 체계도 미비하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 범위는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가자지구는 누가 임시 행정을 맡을 것인지, 이스라엘의 통제는 어디까지 용인될 것인지, 이스라엘이 실제로 레드 라인까지 철수할 수 있을 것인지 등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부실하게 남아 있으며, 이는 평화구상을 실행 가능한 합의가 아니라 선언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다.

셋째,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팔레스타인 내부의 정치 역학 역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부의 극우주의자들은 철군을 반대하며 연정 탈퇴 카드를 들고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비리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데다가 전쟁 발발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에 직면한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정권의 생존을 위해 분쟁 상태를 연장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또한 팔레스타인 내부의 이견도 무시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철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휴전은 하마스에 대한 안전 보장과 연결된 문제인 데다가, 완전한 무장 해제는 자발적으로 이끌어 내기 어려운 사안이다. 실제로 하마스는 완전한 무장 해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 있다.

여기에 하마스는 물론 팔레스타인 이슬람지하드(PIJ) 등 가자지구 내부의 여러 무장 단체 사이에서도 가자지구의 미래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가자지구 세력과 서안지역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사이의 권력 경쟁 또한 평화구상의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다.

넷째, 무엇보다도 현 평화 구상에는 전쟁의 근본 원인, 특히 팔레스타인의 주권과 국가 지위 부정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중동정세 전망과 함의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과 이를 국제질서 속에 고정하려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중동의

평화·재건·국가건설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그러나 평화구상의 구조적 미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부의 복합적 정치 요인,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민족·종교·영토 문제는 현재의 휴전을 매우 취약하게 하고 있다.

700여 일간의 전쟁은 중동 전역에 깊은 상흔을 남겼으며 국제법·국제규범·외교적 중재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가 다시금 제기되었다. 이스라엘은 역내 패권적 위치를 한층 강화하고 미국의 절대적 지원을 재확인했다. ‘저항의 축’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으나, 이란의 영향력이 감소한 대신 각 조직들의 자율성과 비대칭 공격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는 지역 안보 불안정이 새로운 형태로 재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스라엘의 추가 철군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마스 무장해제가 선행되지 않는 철군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용인되기 어렵고,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시 상태 유지에 기댈 가능성이 있다. 중동 질서는 휴전 2단계의 실질적 이행, 저항축의 회복탄력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중재가 맞물릴 때 비로소 안정적 궤도에 접근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평화는 위협의 제거가 아니라, 제도화된 상호 억지와 상호 이익의 설계에서 나온다. 검증 가능하고 투명한 절차, 책임 있는 행위 규범, 공정한 재건, 그리고 신뢰 구축을 위한 장치들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위태로운 평화는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김은비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University of Arizona에서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중동안보, 전쟁과 평화 등이다. 최근 주요 저술로는 “시리아 국가건설을 위한 평화구축 과정”(중동학회논총, 2025),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군사적 함의”(지중해지역연구, 2025) 등이 있다. (srain11@korea.kr)

가자 평화 구상 이후 중동 정세
김은비(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부교수)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권보람(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권보람(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와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당성 확보
- 둘째, 조건에 기초한 전략권 전환 계획의 추진을 위한 한미의 구체적 협력 절차를 명시하고, 한국의 필수 능력 획득을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셋째, 주한미군의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평화를 위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주한미군의 전력과 태세 수준의 지속 유지 공약
- 넷째,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상징하는 한미 간 조선 및 유지, 보수 및 정비(MRO) 협력 구체화
- 금번 SCM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관세 협상과 맞물린 재협상의 여지가 있고, 동맹간 물질적 비용 분담과 역할분담 차원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토대로 확고한 대한반도 방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지역 역할 수행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결단이 필요

배경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개최했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 간의 연례 협의체로서 양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제57차 SCM에서 한미 국방 당국은 세계 질서 대변동과 국제안보환경의 복합 위기와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안보의 경제화와 경제의 안보화가 동시 진행되면서 미국 대외관계 재조정과 글로벌 동맹체계의 최적화(optimization)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일방주의와 거래주의 협상 방식 때문에 많은 변동성이 예측되는 가운데 관세의 격상 때문에 특히 경제와 경제안보 이슈가 동맹 현안 협상에서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가 조명 받았다. 지난 8월 한국 신정부가 개최한 최초 한미 정상회담과 10월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에 주력하며 동맹 현대화 내용을 포함한 국방현안은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국방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합의 사안에 대한 추측이 많았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앞세워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적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남부 국경안보와 서반구 통제를 포괄하는 본토방어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미국 국방전략의 우선순위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었다. 본토방어 중시와 대중국 견제가 마치 이분법적으로 양분되어 전자의 강화가 후자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까 하는 우려가 대내외에서 제기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한미 간 SCM에서 합의된 내용은 미국의 동맹 협력 방식과 발간 예정인 미국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우선순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 안보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글로벌 공공재를 위해 미국이 그동안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해왔기 때문에, 동맹국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원동력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과 함께 동맹국의 비용분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1980년대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동맹을 무임승차하는 불청객으로 경시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재집권 후에는 동맹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을 분리해서 대응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후자의 산업적, 기술적 기반을 통합해 동맹관계를 최적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방비와

주한미군, 전략권 전환, 확장억제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협상에서 군사력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협력이 강조되고 그 범위와 비중이 확대됨으로써 동맹 현대화의 담론이 국방 외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미국이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전력 투사와 자원 낭비를 줄이고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승리해 전 영역에서의 패권(hegemony)이 아닌 수위(primacy)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거나 관료들이 조직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단어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전술적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이래 미국의 주요 국가전략서는 중국을 치명적 군사위협(pacing threat)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합의는 견고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본토방어를 강조하는 데에는 강력한 이민정책과 마약범죄 척결을 강조하는 국내정치적 목적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메리카 대륙 주변부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통해 서반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략경쟁에 유리한 포석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제57차 한미 SCM의 주요 성과와 과제

금년도 SCM 공동성명은 직전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 시트 발표와 연동되어 이례적으로 늦게 발표되었다. 전체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과 성과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할 것과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당성을 확보했다. 한미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재협상하지 않고 국방비를 포괄적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미 정부 간 공약의 연속성을 시연하는 대표적 성과이다. NATO 동맹국에 이어 한국도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력에 부합하는 개별적 국방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하고 글로벌 동맹 체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북한을 비롯한 역내 다영역 안보위협이 상호연계되어

복잡화되고 지역간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위협뿐 아니라 역량을 토대로 한 강력한 방위태세 확립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둘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 계획의 “체계적, 안정적, 능동적” 추진을 위한 한미의 구체적 협력 절차를 명시하고, 조건 충족을 위한 한국의 필수 능력 획득을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기초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 이슈는 동맹과 지역 안보에 대해 갖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 중요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대비와 함께 지속적인 미국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나아가 한국이 갖추어야 할 필수 능력의 양적, 질적요건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무엇인지 식별하고, 그것을 미국산 무기 구매뿐 아니라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 나아가 공동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셋째, 주한미군의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평화를 위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주한미군의 전력과 태세 수준을 지속 유지할 것을 공약했다. 예년처럼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구성 변화와 역내 역할 확대가 논의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0월 미 상원을 통과한 2026년 회기 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28,500명의 현 수준 유지 권고와 주한미군 관련해서 의회 승인 없는 예산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인 축소 가능성은 낮다. 미국은 연초부터 제이비어 브린슨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가 아닌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억제력을 위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넷째,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상징하는 한미 간 조선 및 유지, 보수 및 정비(MRO) 협력을 구체화했다. 군수지원함과 같은 비전투함정뿐 아니라 전투함정의 MRO 가능성이 명시됨에 따라 한국이 역내 주요 거점으로서 미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고 양국 간 산업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열렸다.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ER) 차원에서 해상, 항공자산뿐 아니라 지상자산에 대한 한국 방산기업의 MRO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미 양국 차원뿐 아니라 역내 유사입장국과의 동맹 간 협력 기회도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한미 군 당국 간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지만, 한미 정상회담 팩트 시트에 명시된 한미동맹 관련 내용과 한반도와 지역 연계 내용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양국 실무자들이 협의해나갈 사안이 적지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징인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협상의 연속”을 고려한다면, 제57차 SCM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세 협상과 맞물린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 미국 국내정치도 변수이다. 지난 11월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의석을 확보한 데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이 불필요한 행정명령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함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의석을 차지한다면, 대통령의 결정사항에 대한 재검토 요구와 예산편성 거부 등을 통한 의회 견제가 예상된다. 당론과 별개로 각 주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고려해야 하는 일반 시민의 요구는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한 제어가 가능해질 수 있다.

한미 간 쟁점화 될 수 있는 첫 번째 사안은 동맹 간 물질적 비용분담이다. 한국은 국내법에 기초한 신속한 국방비 증액을 약속했지만, 중간선거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미국은 2030년까지 공약한 2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에 대해 직접 관여하려 하거나 재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안보적,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강조하면서 버티는 대미 전략이 필요하다. 제12차 SMA를 개정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이 어떻게 국방비 지출을 늘려갈 계획인지에 대한 대국민 설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사안은 동맹 간 역할분담이다. 한미 정상회담 팩트 시트에는 한미가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2006년 한미가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별개로 전략적 활용 증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한반도 방어 외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해 역내 미국산 무기를 추가 배치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하는 미국의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한미 군 당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에 공감한 만큼, 3자 연합훈련과 정보공유의 확대가 요구될 수도 있다. 미중 경쟁 심화 구도 속 중일 관계가 악화되는 국면에서, 한반도 방어에 주력하는 한국군과 대중국 견제에 기여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구분하고, 중일 양국과 개별적인 전략 대화를 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내 위협에는 북러 간 밀착에 의한 위협도 상존하기 때문에 중국 담론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공급에 대해서도 해당 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가 요구될 것이다. 현재 기술적 가능성과 전략적 필요성, 역내 군비경쟁 심화 야기 등 세부사항에 대한 대내외 이견이 많다. 무엇보다 한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과업은 미래의 하드파워(guns)를 위해 현재의 경제적 자원(butter)을 막대하게 투자해야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 설정과 지속 가능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운용하는 데에는 비확산이라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 우방국을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공공외교도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통해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언급했듯, 이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치는 높다. 한국은 자체 국방력 강화를 토대로 확고한 대한반도 방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지역 역할 수행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결단해야 할 것이다.

권보람은 2013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채플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한미동맹, 미국 외교정책과 국방전략이다.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과 한국 중심의 네트워크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관심이 많다. 대표 저술로는 “美 국방전략의 본토방어 중시 vs. 대중국 견제 기조와 시사점”(KIDA 안보전략 Focus, 2025년 11월), “Revisiting the Drivers and Conditions of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Development”(Defence Studies, 2025년 3월), 권보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망: 외교정책결정집단을 중심으로(EAI, 2024년 10월)” 등이 있다 (brkwon@kida.re.kr)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국방부 및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